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 방안

청년일자리 필요성

청년세대 실업 증가는 지역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며, 향후 소비기반의 붕괴를 초래

- 청년실업은 향후 소득 증대를 위한 원천이 소실되는 특성으로 타 연령층의 실업과 비교할 때 문제의 심각성은 배가

지역 및 산업분야별로 업종(첨단 및 낙후)간 괴리로 구직부문에는 실업을 발생시키고, 구인부문에는 인력부족의 문제에 봉착

- 노동시장의 고용창출과 고용구조 개선 정도가 약화되어 타지역에 비해 낮은 자체 고용 및 파급 초래
-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육기관 및 직업관련 프로그램의 개편 방안 필요

사업체 수요 대비 실질적인 노동 공급 매치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 방안의 구축 및 실행이 필요한 실정

- 청년계층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직종선호 또는 취업관행에 대한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청년계층은 대기업 직원 또는 공공기관을 조건 없이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전공에 맞는 분야의 개발 필요
- 더불어, 연관 직종을 선호하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수요에 맞춘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공급 개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

청년일자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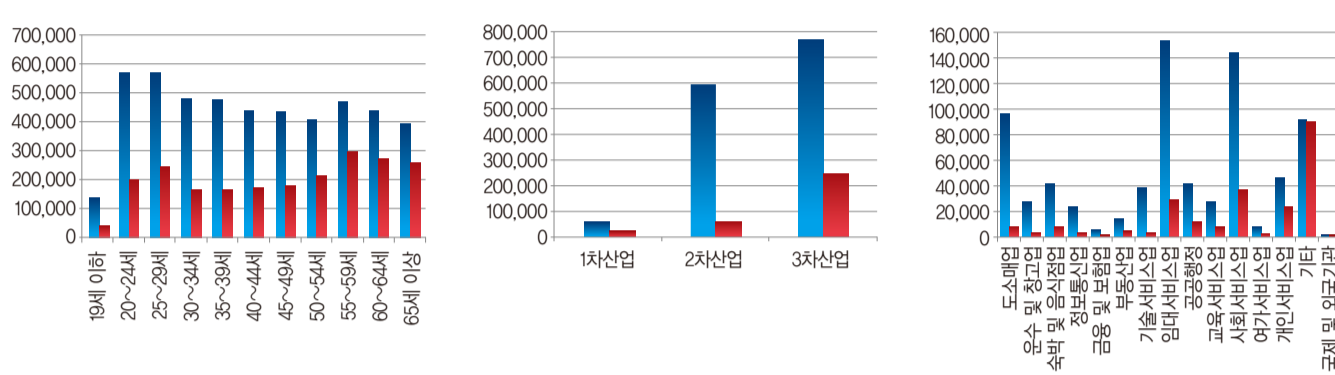
청년일자리 구직 및 취업 현황

고용부의 취업지원 및 알선으로 인한 일자리 구직건수는 4,513,114건이며, 전체 취업건수는 1,737,263건

- 즉, 구인구직 후 약 38% 취업연계가 되며, 높은 연령일수록 취업률은 증가
- 학력별 취업건수는 고졸 및 대졸에 비해 전문대졸 및 대학원 이상일수록 구직 후 취업으로 연계

주요 일자리 공급 부문은 3차산업 부문으로 2017년 기준 3차산업 부문의 구인이 전체 구인의 55.1%였으며, 이중 84.7%가 취업

- 3차산업 부문 중에서는 교육서비스업(26.2%), 사회서비스업(25.5%), 부동산업(24.8%), 숙박 및 음식점업(17.7%) 등으로의 취업 연계가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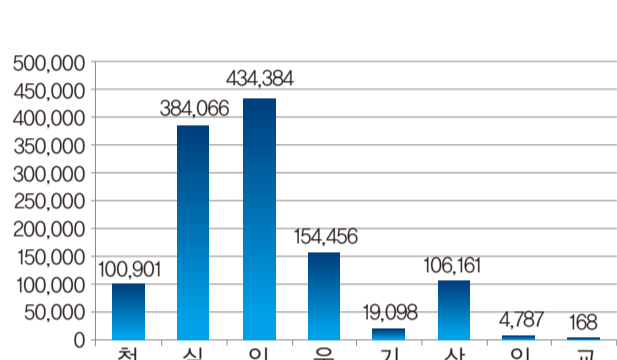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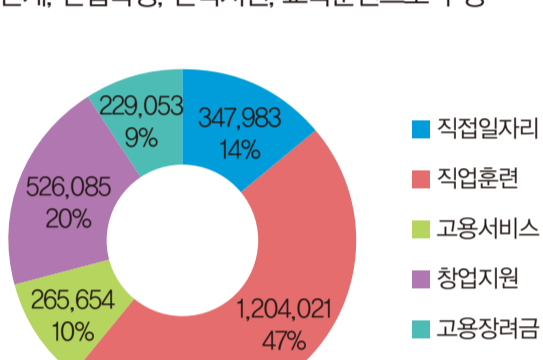


청년 일자리 취업 현황(2017년 1월~12월)

청년일자리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청년일자리 사업은 직접일자리, 훈련, 취업진로 및 경험지원에 대한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

- 2017년 일자리 정책약 2조 5천 7백억 원, 60개 중 47%가 직업훈련에 대한 예산으로 27개의 산업이 운영
-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정책은 전체 일자리 사업의 약 47%이며, 청년지원, 실업자, 인프라, 운영지원, 기업연계, 산업육성, 인력지원, 교육훈련으로 구성



일자리 지원 정책 및 직업훈련 지원정책 분류

18세~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취업성공패키지(고용부가 진단 및 상담부터 직업 알선까지 전과정에 통합제공

- 특히, 자가진단을 통해 6가지 유형별로 향후 취업지원 경로설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D유형은 해외취업, F유형은 중기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연계하여 취업지원 수행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 6가지 유형 분류

취업지원을 위해 유형별 및 맞춤형 프로그램(고용부) 운영 중

- 자기개발 등 실직기간 중 재교육을 통한 취업 가능성 증진에 대한 성취프로그램, 사회생활 적응에 대한 취업희망 프로그램, 청년 취업준비생에 대한 직업흥미 및 특성 개발에 대한 CAP+(청년직업지도) 프로그램, 오랜 실직 또는 취업실패 청년 대상 aIA(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 고졸예정취업준비생에 대한 H(고졸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취업성공 이력서 작성에 대한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지원자의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됨
- 이외에 성실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55세 이상에 대한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주부재취업설계 프로그램 역시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

청년일자리 지원정책 문제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교육 지원정책 중 대학생 이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사업은 약 7개 사업이며, 주요 사업은 인프라 구축이 약 36%를 차지

- 따라서, 청년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 사업은 주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에 대한 것으로 구분
- 반면, 산업 육성은 전체 시도별 특화 정도에 따른 산업 육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직접 고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반적으로 기여하지만, 연령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는 차이 발생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항은 직업훈련에 대한 몰입이 아닌 지원자 의사에 맞춘 맞춤형 취업교육이며, 이를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취업연계를 시키는 것이 쟁점

- 최근 교육부 정책 중 대통령 보고를 통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일자리 및 R&D 개발에 대한 산학 연계형 정책개발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다시 혁신도시 시종2로 연계되어 지역 거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창출로 연계되고 있는 실정

고용부의 취업통계현황과 같이 구직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은 실무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수록 취업으로의 연계 확률이 증가

- 즉, 실무 경험이 많을수록, 전문대와 대학원 등에서의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 지식 및 업무 능력이 배양된 경우에 취업으로의 연계가 증진
- 반면, 현재 취업 교육은 상담, 심리, 면접 준비, 기업 탐색 등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인재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요구

반면, 구인 기업 및 산업으로의 채용 후 바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구직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격차는 커져가는 양상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개선방안

취업 후 퇴사까지의 순환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일자리 제공 방안 도출

- 즉, 청년층에서 희망하는 직업의 유무 외에 직업의 지속가능 유지를 위한 토대 구축이 미흡한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2017년 40세 미만 피보험자격 취득 건수는 3,636,989건, 상실건수는 3,278,165건)

청년 취업애로층의 특징을 반영한 정책 추진

- 청년계층 실업 축소 방안을 연령별, 전공별 등으로 구분하여 취업애로 요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 확보 필요
- 더불어, 맞춤형 일자리 확보 후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한 문제해결형 접근방법 필요

비자발적 실업에 있는 고학력 비경제활동 청년층에 대한 심화교육과정 개편 필요

- 현행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에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지역내 산업부문에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향후 수요공급 논리에 맞는 노동자 확보와 이를 위한 교육, 정보축적, 성과 공유 등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맞춰 해외 취업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확보 노력 필요

- 해외취업의 활성화는 청년계층 실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제공
- 지역내 우수 인력의 해외진출은 향후 그들이 배운 선진기술과 경영기법을 지역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로 해외취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전선망을 활용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부문 해외취업인턴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관리 필요

벤처 및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를 연계한 일자리 제공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함으로써 주력산업의 발전, 신규투자 유치, 신산업 발전 등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고려
- 더불어, 청년·여성·신종년 등 취업 취약계층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방안 모색 필요